

투데이 칼럼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에 대한 소견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점차적으로 늦추려는 계획하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다양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으로는 국민연금 설계 및 실시 시기(1988년경)의 평균 기대수명(약 71세)과 현재의 평균 기대수명(약 83세)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화로 인한 연금 수령 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누적 연금액으로 볼 때 매지않아 연금 고갈이 예상되며, 이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8년부터 완전한 형태의 노령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제도 도입 직후부터 손을 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불과 17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이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주축 세대는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종신연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기업,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정부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해 직장생활 및 근로기간 동안 소비를 최소화하며 절약하는 생활을 통해 어렵게 자산을 모아, 은

퇴 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려 한다. 즉, 잔여 생애 기간 동안 소비를 경감화하고 안정화하여 삶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국민 중 약 6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약 53%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녀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퇴직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수입

이 현저히 줄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형적으로는 건강해 보일지라도 신체적·생리적 노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평균 기대수명(약 83세)은 증가했지만, 건강수명(약 66~67세)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노령연금 수급액으로 고령사회에서 충분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가공무원, 교직원, 군·경찰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 후 정년 퇴직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늦춘다면,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기간이 5년 더 길어지고 그만큼 생활이 더욱 궁핍해질 것이다.

따라서 연금 수급 연령을 연장하여 현실적·심리적 노후 및 사회보장을 함께화하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산사태 실종자 수색하는 中 구조대



10일(현지 시간) 중국 쓰촨성 이빈시 원랜현 진평촌에서 구조대가 산사태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산사태로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28명이 실종됐으며 2명이 부상했으며 생존자를 찾기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펼치는 아바쿠모바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가 11일(현지 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아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 경기를 펼치고 있다. 아바쿠모바는 22분45초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처음으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설

도내 이동 장터 지속 과제

간단한 식품도 살 수 없는 곳을 이른바 '식품 사막'이라 부른다.

집 앞으로 트럭이 직접 찾아오는 '이동 장터'가 실질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과제도 적지 않다.

진안의 한 마을회관 앞에는 생수와 라면 등을 파는 트럭이 온다.

간단한 식료품을 살 가게가 없는 이른바 '식품 사막'을 찾아온 '이동 장터'다. 주민들은 읍내는 가지도 못한다.

이동 장터 아니면 아무 것도 살 수가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식약처, 국내 한 유통업체는 최근 한 달 동안 매주 한 차례씩 진안과 임실에서 이동 장터를 시범 운영했다.

유통 과정의 변질 우려 탓에 이동형 점포 판매를 금지한 소포장 돼지고기와 닭고기 제품의 규제를 풀어 주민 편의를 꾀하기도 했다.

다만, 농촌지역의 인구가 적다 보니 한 주 평균 판매액이

40만 원에 그쳤다는 게 부담이다. 운영비용 2백만 원도 채우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꾸준한 매출을 보장하지 않으면 민간업체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개선택을 찾고 있다.

우선 지역농협의 협조를 얻어, 완주와 장수에도 추가로 '이동 장터'를 보낼 방침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최대한 갖춰 실제 이용률을 높이고, 업체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문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올해는 지역 농협 중심으로 농촌 개발 사업의 일부 사업비를 활용한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전북자치도는 수요가 많지만 여전히 이동 점포 판매가 금지된 달걀 등의 구매를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에 전달했다. '이동 장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직권 남용 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 유죄를 입증하는데 좀 불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검찰은 다른 주요 사건에서도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관행 상,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거나, 공소 시효가 임박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히 기소 전 대면 소환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가지고 법정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번 판단에도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기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을 불허한 법원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소 혐의에 내란우무머리 혐의만 적용됐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빠진 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길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무머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시를 했다.

123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경비대 경찰관들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시도를 방해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헌법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로만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